

민주, ‘尹 사저’ 압수수색에 “면피용 뒷북 수사 용납 못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압수수색도 의심 키워”
檢, ‘건진법사’ 의혹 관련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 전 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인가.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인가, 아니면 수사소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벌드업’인가”라며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채해병 사건, 마약 구멍 로비, 명대군 게이트와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허까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일이 아플 지경”이라며 “검찰에게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선욱 기자



이준석 “문지마 단일화 응할 생각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며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

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다.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라며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빅텐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 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 팔이에 불과하다”며 “정치를 양쪽으로 갈라 독단과 폭주, 거부권과 탄핵으로 점철됐던 지난날의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왔다”며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더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다.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압도적 협치를 이루는 빅텐트가 될 것”이라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

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 및 3년 내 사용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1일 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규정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곰팡이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쏠쏠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휴가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도 늘린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유효와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수권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